

연이은 초미세먼지 특보...“악화 여부 분석 필요”



광주와 전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4일 광주 동구 일대가 미세먼지 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경보제가 도입된 2015년 이래 광주와 전남 지역 초미세먼지(PM2.5) 특보가 연이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보 발령 기준이 강화된 점, 자료 축적을 통한 객관적 분석 필요 등으로 '초미세먼지가 악화됐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5일 광주·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서부권은 지난달 28일 오후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초미세먼

지 경보제를 도입, PM2.5미세먼지 농도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첫 경보 발령이다. 현재 초미세먼지(PM2.5) 경보는 초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될 경우 발령되는데 지난 1일 오전 11시까지 광주의 시간당 평균 농도는 172 $\mu\text{g}/\text{m}^3$ 까지 치솟았다. 경보 발령 기간 중 전남 서부권의 PM2.5미세먼지 최고 농도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께 기록한 166 $\mu\text{g}/\text{m}^3$ 였다.

광주·전남 보건환경연구원, 옛새찌 주의보
올해 첫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주의보 11회
전문가 “발령 기준 강화·충분한 데이터 필요”

광주와 전남 서부권은 지난 1일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낮아져 주의보로 전환발령돼 유지되고 있다. 주의보가 처음 발령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옛새찌다. 초미세먼지(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지는 주의보는 광주와 전남(동·서부 포함)지역에 2015년부터 지난 4일까지 총 49회 내려졌다. 같은 기간 광주와 전남에는 각각 31회·18회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연도별로는 광주의 경우 2015년 10회·2016년 2회·2017년 7회·2018년 7회·올해(1월~지난9일) 5회였다. 전남은 2015년 5회·2016년 2회·2017년 0회·2018년 5회·올해(1월~지난9일) 6회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1월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두 달 남짓한 사이에 광주·전남의 발령횟수는 각각 5회·6회로 총 11회에 달했다. 다만 2015년 한 해에만 현재의 시간당 평균 농도 외에 이동 평균 농도(일정 시간대 시간당 농도의 평균값)도 적용해 농도 기준이 엄격했다. 현재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5

년 실제 경보 발령 횟수는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초미세먼지 문제 악화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PM2.5미세먼지 발령 기준 강화를 고려해야 하고 충분한 시계열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PM2.5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준은 지난해 7월1일 시간당 평균 농도가 기존 90 $\mu\text{g}/\text{m}^3$ 에서 75 $\mu\text{g}/\text{m}^3$ 로, 경보는 180 $\mu\text{g}/\text{m}^3$ 에서 150 $\mu\text{g}/\text{m}^3$ 로 강화된 바 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주의보가 옛새찌 유지된 것은 이례적이다”면서도 “지난해부터 강화된 경보 발령 기준에 따라 주의보 발령 빈도가 늘었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달라진 ‘갯배’에 맞춰 체감하는 위기 의식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 간 연평균 PM2.5미세먼지 농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미세먼지가 악화됐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최소 평년(30년) 자료가 확보돼야 객관적인 추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Photo 漫評

부덕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명박전 대통령의 보석보 증급 등 조인을 내건 섣불리 하게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 회로 지난달 28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pm 4.4\%$ 포인트)한 결과 이전 대통령 보석 허가 반대 응답은 60.3%였다. 보석 허가 찬성 응답은 반대의 절반 수준인 30.4%였고 모름·무응답은 9.3%였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전 대통령을 방어진 보장과 당노·수면무효 등 집합으로 인한 돌연사우려를 이유로 지난 1월 헌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 이번 주 결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살상해 본다.

조인호 기자·자료사진=뉴시스



광주 북구 중흥3구역 생존권 사수 비대위

“재개발 원주민 생존권·재산권 보장하라”

어제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 가져
재개발을 둘러싸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 광주 북구 중흥3구역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병천)는 5일 원주민 생존권·재산권 말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하게 수용한 재산권에 대한 취소 등을 주장했다. 재개발 부당수용에 반발하는 원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광주시청앞에서 가진 이날 회견에서 *수용재결 취소 *절차상 하자로 불법을 묵인한 책임자 처벌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 문책 *재개발조합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보상협의회 회의록에 중요한

사안이 누락돼 수용재결이 부정한 것이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도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이같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장 면담을 통해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은 물론 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인바다. 유병천 비대위원장은 “수십년을 살아온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쉬운데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재산권은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린 원주민들의 처지는 비참하기 그지없다”며



“광주시의 북구청, 재개발조합 등은 우리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한 사람의 피 해지도 없도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KFS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Fb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매매·임대차·매입비축·임대수탁
· 매매·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 받아 임대
청년창업농, 2030세대, 귀농인 농지지원
· 청년창업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금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중도인출 가능)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75세까지)

독특한 농지관리 전문가 농지은행 |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농지연금 | 문의 전화 1577-7770